

사내 변호사를 위한 ACP의 국내 도입을 위한 유럽 사례 연구 조사

I. 서론: 한국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부재와 국제적 필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준법 경영 및 기업 윤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법률 자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에 대해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보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 사내변호사 ACP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 대륙법계 주요 국가들의 ACP 제도 도입 사례와 그 법리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조사와 관련된 *악조노벨(Akzo Nobel)* 판결에서 제시된 '독립성' 원칙과 이에 대한 유럽 각국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문헌 검토: ACP의 개념과 법리적 이분법

2.1 ACP와 법률전문가 특권(LPP)의 개요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 자문 관련 통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변호사가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공리주의적 목적을 가진다.¹ ACP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통신을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적대적 소송을 예상하여 준비한 자료를 보호하는 '업무상 산출물 원칙(Work Product Doctrine)'으로 구분된다.¹

2.2 영미법계 vs. 대륙법계: '특권'과 '의무'의 차이

ACP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영미법계 (미국, 영국 등):** ACP를 **의뢰인의 권리**로 간주한다. 즉, 특권의 주체는 의뢰인이며, 의뢰인만이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내변호사를 외부 변호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며, 이들의 법률 자문 커뮤니케이션도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가진다면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² 다만, '의뢰인'의 범위나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국가별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³
-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등):** ACP를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로 규정한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적 의무'로 간주되며, 의뢰인이 임의로 포기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다.⁴ 전통적으로 이 의무는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고용 관계에 있는 사내변호사는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부족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⁵

2.3 EU의 특수성과 *Akzo Nobel* 판결의 영향

EU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조사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ACP/LPP 기준을 적용한다. CJEU는 *AM&S* (1982) 및 *Akzo Nobel* (2010) 판결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은 EU 경쟁법 조사에서 ACP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립했다.³ 이러한 불인정의 핵심 근거는 사내변호사가 고용주와의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⁶ *Akzo Nobel* 판결은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한정되지만, 많은 회원국의 국가경쟁당국이 이 기준을 준용하는 경향을 보여, 유럽 전역에서 사내변호사의 ACP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⁷

III. 유럽 국가별 사내변호사 ACP 모델 분석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은 EU의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준법 경영 지원이라는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혁하거나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유럽 ACP 환경의 다층적이고도 역동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3.1 '완전 인정' 모델: 영미법계의 영향

영국과 아일랜드는 영미법의 전통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ACP를 외부 변호사와 완전히 동일하게 인정한다.²⁸ 이는 사내변호사의 '법률적 역량'으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변호사 자격 보유 및 독립적인 활동이 인정될 경우 특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범위 식별 문제나 '주된 목적' 테스트와 같은 복잡성이 존재하며, EU 경쟁법 조사 시에는 *Akzo Nobel* 판결에 따라 ACP가 불인정되는 예외가 적용된다.²⁹

3.2 '조건부 인정' 및 '하이브리드' 모델: 대륙법계의 진화

최근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은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혁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3.2.1 프랑스: 2023년 개혁과 '실용적 접근'

프랑스는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민사, 상사, 행정 사안에 한정하여**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기밀성 보호를 도입했다.⁶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학 석사 학위 및 윤리 교육 이수, ▲문서에 "confidentiel – consultation juridique juriste d'entreprise"라는 명시적 문구 표기, ▲문서의 추적 가능성 등 엄격한 조건 충족이 요구된다.⁶ 이는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독립성' 논쟁을 우회하여 행위와 절차 준수를 통해 보호를 제공한다.

3.2.2 스위스: 2025년 민사 소송 특권 도입

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민사소송법(CPC)을 통해 사내변호사 특권을 도입했다.⁷ 이 특권은 **오직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며, ▲회사의 상업 등기부 등록, ▲법무팀 책임자의 변호사 자격, ▲해당 활동이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⁷ 이는 국제 소송에서의 절차적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3.2.3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구조적 보완을 통한 인정

- **벨기에:** 기업변호사협회(IBJ/IJE) 회원 자격을 갖춘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하며, 국내 절차(경쟁법 조사 포함)에서는 이를 적용한다.¹⁰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시에는 *Akzo Nobel* 판결에 따라 불인정된다.¹⁰
- **네덜란드:** 변호사 협회 가입 및 고용주와 '직업 규정(professional statute)' 체결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우 ACP를 인정한다.³⁴ 이는 독립성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 **스페인:** 국내법은 사내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를 구분하지 않으나, 경쟁 당국은 EU 관련 조사 시 *Akzo Nobel* 판례를 따라 사내변호사 특권을 불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¹²

3.2.4 기타 국가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등)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자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에게 광범위한 ACP를 인정한다.¹³ 그러나 EU 경쟁법 조사 시에는 *Akzo Nobel* 판결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3.3 불인정 및 제한적 인정 관할권 (전통적 입장 고수)

독일, 스웨덴,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는 여전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ACP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이들 국가에서 사내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기업은 내부 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⁵³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신디쿠스 변호사(Syndikusrechtsanwalt)'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증거 제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 내 문서 압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⁵³

IV. 한국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유럽의 다양한 사내변호사 ACP 사례 연구는 한국의 ACP 제도 도입에 있어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법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프랑스 모델의 실용적 접근법 참고

프랑스의 2023년 개혁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참고 사례이다. 이는 ▲민사, 상사, 행정 사안으로 제한된 범위, ▲변호사 자격, 윤리 교육 이수, 문서 표시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전통적인 법리 논쟁을 우회하고 실용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법조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2 벨기에/네덜란드의 '구조적' 독립성 보장 장치

벨기에의 사내변호사 협회 설립 또는 네덜란드의 '직업 규정(professional statute)' 체결과 같은 구조적 장치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한국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내변호사를 위한 등록 제도나 '독립성 서약'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3 한국 도입을 위한 제언

- **단계적 입법 접근:**
 - **1단계:** '사내변호사 법률 자문 비밀성 보장'에 관한 독립 법률 제정. 적용 범위를 민사 및 상사 사안으로 제한하고, 변호사 자격, 윤리 교육, 문서 표시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이는 프랑스 모델의 실용성을 반영한 것이다.
 - **2단계:** 운영 평가 후 적용 범위 확대 검토 및 '기업법무변호사 특별 등록부'와 '독립성 서약' 제도 도입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는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제도적 접근을 참고한다.
- **유럽 사례의 교훈 반영:** EU 경쟁법 조사 시 사내변호사 ACP가 불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조사에 대비한 외부 로펌 선임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각국의 법률과 규제 당국 관행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해관계자 협력 및 사회적 합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V. 결론: 조건부 수렴을 향한 궤적과 한국의 과제

유럽의 다양한 사내변호사 ACP 사례는 한국이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의 조건부 인정 추세와 실용적인 접근법은 한국의 법적, 문화적 맥락에

맞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의 경험은 '독립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경제적 실용주의가 법적 전통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